

### 올해 AI 직격탄 맞은 오리... 수급에 문제 없나

올 초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종오리와 육용오리 사육마릿수가 크게 줄었지만 연말까지 오리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오리고기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수급조절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오리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종오리·육용오리 살처분 마릿수는 각각 53만여 마리와 267만여 마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오리 사육마릿수 역시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6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오리 사육마릿수는 608만 9,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때(1,328만 7000마리)보다 54.2% 감소했다. 이 중 종오리는 70만 9,000마리, 육용오리는 538만 마리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48.2%, 54.9% 줄었다.

그렇지만 6월 이후 AI가 주춤해지면서 사육마릿수가 다시 늘었다. 오리업계 한 관계자는 “종오리의 경우 올 초 많은 수가 살처분됐지만 9월 현재 사육마릿수는 지난해의 80% 수준까지 회복됐고, 육용오리 역시 마릿수가 많이 증가한 상태”라며 “10월 이후 AI가 급격히 확산돼 오리농가가 큰 피해를 입는 상황만 발생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오리 수급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11월 오리 관측 자료에 따르면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난해 8월의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9월엔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가 57.2, 10월엔 63

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

5월 중순 마리당 2,200원까지 뛰었던 육용오리 병아리 가격 또한 8월부터 평년 수준인 8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오리 병아리 공급 마릿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오리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오리고기 소비부진 현상이 오리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는 “전체 사육마릿수 감소로 오리고기 공급량이 20% 정도 감소했지만 육용오리 산지값(3kg 기준)이 마리당 평년 수준인 6,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비 역시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사육마릿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오리고기 소비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지인배 농경연 축산관측실장은 “위축된 오리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오리고기가 건강에 좋은 점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수요를 최대한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2014. 10. 10]

### 전북도, 닭·오리 이동 시 AI 검사 강화

전북도는 지난달 9월 24일 전남 영암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도내 사육하는 닭과 오리를 이동(도축 출하, 판매 등) 시 해당 시군에 신고

해 출하검사를 받고 출하해야한다고 밝혔다.

닭 사육농가는 이동(출하) 전 해당 시군에 연락해 가축방역관으로부터 임상관찰을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해야 한다.

오리 사육농가는 이동(출하) 전 해당 시군 또는 축산위생연구소에 사전 신청해 AI 바이러스 유무검사를 실시(검사기간 6~8시간)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 가능하다.

전북도는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도내 AI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며 축산농가 모임 자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및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한국농업신문 이상국 기자 [2014. 10. 09]

## 닭, 오리 유통업체, '갑질 횡포' 축산농가 99% 불만

올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70%가 축산관계자와 차량을 통한 수평전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닭과 오리 농장을 관리하는 계열화주체의 방역과 관리 소홀 등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닭과 오리를 키우는 축산농민들은 계열화사업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육계 계열화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축산농민들의 계열화사업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3,43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0가구 가운데 0.9%만이 계열화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분석 결과 사육농가의 76%가 사육수수로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계열화주체가 공급하는 병아리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농가도 64%에 달했다.

특히, 가금류 생산농가의 69%는 자신들이 키운 닭과 오리가 계열화주체에 의해 등외품 판정을 받아 사육비가 감액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황 의원은 "계열화주체들이 등외품에 대해선 사육비를 감액 지급하면서, 자신들은 단육이나 부분육으로 판매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육계산업 90%이상이 계열화사업 체계로 묶여 있어서 사업자와 사육농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정확한 유통실태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2014. 10. 07]

## 경남 가축 전반적 감소 속 오리 증가

오리가 대세인가. 경남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축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오리의 경우에만 다

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2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는 29만 9,500마리로 2분기보다 1.8% 감소했다.

젖소가 1.4% 증가했지만 한·육우가 2.2%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주도했다. 한·육우 사육농가도 2분기 1만 4,827가구에 비해 693가구(4.7%)가 줄어들었다.

돼지는 107만 7,400마리로 3만 4,400마리(3.3%) 늘었지만, 사육가구 수는 2분기 642가구에서 573가구로 69가구(10.7%)가 감소했다. 닭은 914만 2,800마리로 2분기보다 33만 1,500마리(3.5%) 줄었다.

이에 비해 오리는 46만 3,400마리로 2분기 38만 100마리와 비교하면 8만 3,300마리(21.9%)가 증가했다. 사육가구 수도 2분기 30가구에서 41가구로 늘어났다.

동남지방통계청은 한·육우 등은 이른 추석에 따른 판매 증가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사육농가와 신규 입식 두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보름간 경남 319개 표본조사구와 일정 규모 이상(닭은 3천 마리 이상, 오리는 2천 마리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 경남매일 박재근 기자 [2014. 10. 12]

### “AI 취약한 오리부터 예방접종” 전남도 5가지 대책 건의

전남도는 지난 9월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발함에 따라 국가재난형 질병인 고병원성 AI의 재발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차원의 5가지 근본대책을 건의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AI에 취약한 오리부터 예방접종을 적극 검토 ▲오리 주산지이며 AI 바이러스의 통제가 가능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전남에 발병 원인부터 백신 개발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한 국립 AI연구센터 건립 ▲AI 발생 위험 시기인 10월부터 그 이듬해 5월까지 반복 발생지역은 오리 사육을 제한하되 농가에 최저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이다.

또 ▲차단방역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축사는 사육을 제한토록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반복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 등도 건의에 포함됐다.

김영선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월 11일 AI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전남을 방문한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에게 “고병원성 AI는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 소독 등 방역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도는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광역 방역기와 소독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 오리농가 전담 공무원(212명)을 활용해 매일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 전면 금지 및 판매업

소 점검·소독 조치, 소독약품(5,000kg) 및 생석회(54톤) 공급, 군부대 제도차량(2대)을 지원받아 가금농가 주변 및 축산관련 차량 이동도로 긴급 소독, 도 축산공무원 동원 농가 소독 여부 상시 점검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두석 도 축산과장은 “AI 예방을 위해서는 상시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장 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매일 2회 이상 내부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AI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1 김한식 기자 [2014. 10. 12]

올해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 사장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인데 상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매년 이맘때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어르신들을 위해 보양식인 오리구이를 대접하고 풍물단 등을 불러 잔치를 벌여왔다.

▶ 경기일보 한상훈 기자 [2014. 10. 16]

## 광주시 광남동 양지오리돌판구이, 어르신 효도잔치 베풀어



광주시 태전동 ‘양지오리돌판구이(대표 김인용)’은 지난 10월 14일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관내 경로당 어르신 6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효도잔치를 열었다.

## AI 또 확산 조짐... 나주시 오리 9,500마리 긴급살처분

국내 최대의 가금류 사육지인 나주를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한 오리 농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이날 오후 방역당국이 오리 4,5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이날 살처분은 지난 10월 16일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가 AI발생 경계지역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해당 농가를 의심농장으로 보고 시료를 채취해간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또 오전 10시께 AI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산포면 등수리 한 농가에서 사육 중 이던 육용 오리 5,000마리도 이날 오후 긴급 살처분됐다.

이 농가에서는 “오리 200마리가 갑자기 폐사하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등 AI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나주시에 신고했다. 방역 당국은 폐사한 오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오후 6시께 AI양성 판정이 내려져 살처분이 이뤄졌다. 이날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농가 2곳은 지난 10월 11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오리 2만 1,800마리가 살처분된 남평면 풍림리 농가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경계지역 농가들이다.

당국의 예찰활동과 방역도 강화되고 있다. 나주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군과 인접한 반남, 공산면 2곳 외에도 남평읍 수청리와 나주대교 인근 금천면 일대에 방역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24시간 방역활동을 벌이는 한편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예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전남일보 박송엽 기자 [2014. 10. 20]



- ① 2014.3.20 충북 진천군 위치추적기 부착
- ② 2014.5.1~5.16 강원도 동천군(북한)
- ③ 2014.5.17 중국 지린성 안투시
- ④ 2014.5.18~5.29 중국 지린성 둔화시
- ⑤ 2014.6.1~10.16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퉁허현
- ⑥ 2014.10.17 경북 경주시 감포천 전촌리
- ⑦ 2014.10.19(현재)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미호천 부근)

현 일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난 9월 사람까지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있는 유형의 고병원성 AI(HPAI H5N6)가 발생했던 곳이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돌아온 청둥오리가 충북 진천에 도착하기 전인

지난 10월 17일 경북 경주시 감포면을 거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주 지역의 분변을 채취해 시료 검사에 들어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 감염 여부 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10월부터 철새 귀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조민영 기자 [2014. 10. 21]

### AI 창궐했던 중서 돌아온 청둥오리 비상

지난 3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 충북 진천을 떠난 청둥오리가 고병원성 AI가 창궐했던 중국에서 머물다 최근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월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한 청둥오리가 최초 부착지인 충북 진천군 미호천 일대에 10월 19일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며 10월 20일 주변 지역과 가금 농장에 주의를 당부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충북 진천에 돌아온 청둥오리는 지난 3월 한반도를 떠난 뒤 6~10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퉁허

### 국내 첫 축산전문 포털 등장 모두커뮤니케이션 '축산정보114' 오픈

국내 최초의 축산전문 포털 사이트(www.modu

114.com)가 오픈됐다. 모두커뮤니케이션(대표 이준길)은 지난 9월 15일 축산전문 포털 사이트인 '축산정보114' PC버전과 모바일버전을 동시에 선보였다. 축산정보114는 축산관련 카다로그를 분야별 품목별로 분류, 축산관련 업체 및 제품을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다. 축산관련 주요 사이트 링크와 품목별 분류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의 카다로그를 종류별로 검색하여 웹상에서 카다로그를 볼 수도 있다.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 되는 기능과 전화 바로 연결기능을 확보, 해당업체의 연락처를 따로 메모하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특징. 인터넷 네이버/다음/구글에서 '축산정보114로' 검색할 수 있다.

▶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14. 09. 24]

## 축산자조금 거출금 인상되나

축산자조금의 거출금 인상론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거출하여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은 물론 소비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 쓰여 FTA 시대에도 국내 축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속내는 자조금 거출금을 인상함으로써 차츰차츰 정부의 지원 금액을 줄여 나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축산자조금단체에서도 그동안 각

종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부족과 함께 정부 지원 일몰제에 대비한 거출금액 인상의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또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 매칭펀드를 완전히 배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리감독만 받는 형태로 자조금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자조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자조금의 경우, 현장의 여론 향배를 가늠하지 못해 공론화조차 시도하지 못해온 상황으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양돈현장의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향후 양돈시장의 심각상황에 대비, 수급조절 자금 180억 원 조성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30억 원씩 3년간에 걸쳐 자조금 90억 원을 조성하고 정부 매칭펀드까지 합쳐 180억 원을 조성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3년에 걸쳐 한시적 인상안으로 자조금 인상건을 협의안건으로 논의하고, 자조금 인상의 필요성과 재원 활용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되, 각 지역 대의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작업,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유가공업계에서도 낙농자조금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낙농자조금 인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자조금 거출금 인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축산신문 김영란 · 이일호 기자 [2014. 10. 16]

**축산인, FTA근본대책 촉구  
'대정부 선전포고'  
비상대책위원회,  
21일 총궐기대회 선포식 가져**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축산생산자 9개 단체로 구성된 FTA반대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가 대정부 선전포고를 통해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FTA반대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창호, 오리협회장)**는 지난 10월 21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FTA근본대책 수립촉구 및 영연방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선포식을 갖고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선포식은 10월 23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투쟁의지를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비대위는 선포식에서 여의도 총궐기대회에 전국의 축산인 3만 명이 상경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선진국들과의 잇따른 FTA에 따라 국내 축산업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축산업 생존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영연방3개국 FTA비준 저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비대위는 10월 23일 총궐기대회 직후부터 9개 생산자단체장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정부는 물론 국회와 국민들

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 10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축산단체장들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총력투쟁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10월 20일 청와대를 방문해 FTA와 관련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해 놓았다.

이창호 비대위원장은 선포식에서 “축산업은 지금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궐기대회는 축산업계 생존을 위한 절규”라고 말했다.

이강우 한우협회장은 “잇따른 FTA로 인해 축산업계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총궐기대회는 시작일 뿐이다. 단식투쟁 등을 이어가며 가축반납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도 “그 동안 수많은 FTA체결 당시 정부는 그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지만 그 많은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실현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근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10. 22]

**전남도, 닭·오리 사육농가  
행사 참석·모임 금지  
AI 방지대책 마련**

전남도는 지난 9월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 발생한 이후 사람 등의 접촉으로 인

한 확산 방지를 위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규모 행사와 지역 축제, 관광을 위한 모임 금지조치를 취했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이는 10~11월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대한민국농업박람회·전국체전·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몰려 있고, 특히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단풍관광을 위한 모임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말부터 이미 많은 수의 야생철새가 겨울 철 월동을 위해 시화호, 천수만 등 우리나라 주요 철새도래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농가 등에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군, 농·축협, 생산자단체에는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소독 강화, 야생철새와 접촉 차단을 위한 차단막 설치 및 임상예찰 등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농가에는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토록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농가 주변을 매일 소독하도록 지도했다.

농장주 및 농가 관리인에게는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 방문을 금지하며,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는 축사 주변에 충분한 양의 생석회나 조류 기피제 등을 뿌려 농가 주변에 철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의 경작지는 추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논갈기를 해 철새가 농가 주변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료 저장시설, 왕겨 저장시설, 분뇨 처리시설은 철새 등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또는 비닐 등으로 가리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울타리가 없는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주변을 지나는 일반인들이 축사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팻말을 설치해야 한다.

도는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오리농가 전담 공무원 212명을 활용해 매일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 전면 금지(9월 29일), 소독약품 및 생석회 공급, 가금농가 주변 및 축산관련 차량 이동도로 긴급 소독, 도 축산공무원 동원 농가 소독여부 상시 점검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수차례 건의한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AI에 취약한 오리부터 예방접종 실시, 국립 AI연구센터 건립, 발생 위험시기인 10~5월 사육 제한, 농가에 최저 생계안정자금 지원,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권두석 도 축산과장은 “철새 도래지를 방문하는 일반인은 철새 분변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신발 세척·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금 사육농가 등 가금 관련시설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예방을 위해 상시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가금농장에서는 농장 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매일 2회 이상 내부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AI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김한식 기자 [2014. 10. 23]



## 닭 · 오리 계열업체 방역의식 아직 미흡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한 계열화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계열화업체의 방역의식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최근 AI가 발생한 전남 영암·나주지역의 도계장과 도압장을 점검한 결과 1계열화업체가 운영하는 도계장에서 오리와 닭을 혼재해 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도계장에서의 오리와 닭 혼재 계류는 요즘 오리를 중심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분리해서 계류하도록 한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해당 계열화업체에 소속된 가축운반차량의 소독·세척 상태 역시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AI 소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소독약으로 가축운반차량을 소독하고, 차량 세척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에 분뇨가 잔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계열화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고, 지자체는 이 업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는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축산 전문가들은 “방역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계열화업체들이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며 “불시에 계열화업체를 점검, 방역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가금류 위탁사육농가들은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가 아닌 계열화업체가 지급받

는다는 점을 들어 계열화업체의 방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영암에서 오리 3만여 마리를 기르는 한 위탁사육 농가는 “가금류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붙어 있던 AI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옮겨져 질병이 발생하면 잘못된 농가 탓이 되고 살처분 보상금은 감액 되더라도 결국은 계열화업체 몫이 된다”며 “계열화업체가 병아리 입식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 개개인의 방역활동 못지않게 계열화업체의 방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2014. 10. 24]

